

‘3000억 배상’ 통보받은 NH투자증권, 수용 거부땀 소송전

분조위 배상결정 강제성 없어
소송땀 투자금 반환까지 2~3년
NH투자증권 “투자자보호에 최선”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전액 투자금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주장한 만큼 장기 소송전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84%인 4327억원을 고객에게 판매했다.

지난해 11월 삼일회계법인인 옵티머스펀드의 실사 결과 전체 펀드 규모 중 7.8~15.2%를 회수할 수 있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반환금을 제외한 3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H증권, 다자배상안 불발… “사후정산 방식 분쟁 조정 어려워”

당초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옵

티머스 분조위 백브리핑’을 통해 “다자배상안은 가장 최근에 제안받았다. 분조위 안건이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된 상태라 다자배상 검토의견을 물리적으로 분조위 안건으로 올리기가 어려웠다”며 “사실상 판매사 외에 하나은행과 예탁원 등의 없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취소라는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이 명확해 분조위에서는 어떤 것이 합리적, 객관적, 중립적인지 판단이 중요하다”며 “다자배상안을 통해 상식적인 것을 던진다고 한들 다른 법률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선례로 투자자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소 20%, 평균 40%의 투자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기 상품 판매에 있어서 투자자 책임을 어떻게

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판매사들이나 자산운용사, 사무관리회사가 이번 계기로 내부통제, 상품을 잘한다면 지금과 같은 착오 취소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 ‘강제성’ 없다지만

이번 분조위의 전액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된다면 투자금 반환 절차는 최소 2~3년이 걸린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를 설득하기 쉽다는 근거를 들며, 더 빠른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보는 “NH증권이 빠른 배상을 위해서는 다자 배상이 더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사회에 있는 선지급 경과를 지켜보면 선지급·선유동성 과정에서 사외이사 3명 사퇴하는 등 어

“사실상 투자 불가능한 상품”

▶▶ 1면 “옵티머스 펀드”서 계속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했고, 이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에 만기가 돌아온 펀드의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명기된 건설사 역시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번 분조위 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지급을 결의했다”며 “분조위에서는 NH투자증권도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자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합리적 판단,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취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적이익을 취득한 게 아닌 이상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사외이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건 판매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투자자를 위해서라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소송에 부채까지...이스타 매각 ‘산 넘어 산’

3주내 이스타 공개매각 입찰 공고 각종 미지급금 등 부채만 2000억 반환 소송 등 새 인수자 찾기 난항 항공기·인력 등 구조조정은 이점



이스타항공 항공기.

연이은 매각 실패로 인해 결국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여전히 새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안진은 법원에 이스타항공의 재산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 회생법원은 3주 이내로 공개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입찰 공고는 이달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스톱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데,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스토킹 호스방식의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까지 우선 매수권자가 나타나야 한다. 이스타항공의 법원에 대한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절차대로 공개매각이 진행된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M&A(인수 합병)가 무산된 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두고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각종 미지급금 등 약 200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를 통해 정해지는 회생채권의 탕감 비율 등에 따라 이 같은 부채도 대폭 줄어든다는 게 이스타항공 회생관리인 측 설명이다. 다만 약 600억원~700억원에 달하는 임금채권과 퇴직금 등은 탕감되지 않는다.

반면 구조조정을 통해 작아진 회사 규모는 매각 시 긍정적 평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항공기, 인력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질적으로는 직원 470명이 있고, 항공기도 반납 등으로 인해 4대만 남아있다.

이스타항공 회생관리인은 “인수 협상 완료 목표 시점은 올해 6~7월경이다. 우선 매수권자와 협상 등으로 인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다”라며 “국채선을 운항하려면 최소 비행기가 5대 있어야 한다. 이에 향후 언제든지 원하면 1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리스사와 약조를 맺었다. 인수자가 나타나면 국채선도 띄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국가부채 2000조원 육박 코로나에 나라 곳간 위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전년 대비 13.9%인 241.6조 증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 846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채발행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 실질 나라살림을 가능할 수 있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1924조5000억원(잠정치)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 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부채를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11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

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130조원 증가했다. 이 중 연금총당부채는 100조5000억원 증가(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했는데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86조4000억원)이 대부분 차지한다. 기타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29조5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3조7000억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통계청 추계 인구(5182만명) 기준으로 1인당 1634만원 꼴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원으로 400조원대를 넘어 이후, 2014년 533조2000억원, 2016년 626조9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에 이어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1000억 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